

광남시론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이미 넘었다. 정부는 지난 경선이 저지른 허무맹랑한 내란의 종식과 세계질서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정세의 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전환기적 과제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실용적이고 과감한 리더십은 지금 우리사회에 큰 동력이 되고 있다. 현 정부가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정책의 집행을 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주의를 따르고 있다. 정치와 행정의 본질은 결국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 빠르게 발굴하고 과감한 결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가는 모습은 행정의 유능함을 증명한다.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반도체 등에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실용적 접근은 국민들에게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도약이 한민족 모두의 번영과 직결되므로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필자가 생각하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사구시의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길이 더욱 넓어졌다. 지난 1월 중국 시진핑의 국민방문과 함께 한중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상회담에서는 한중관계복원, 장관급 정례협의체 구축, 문화 콘텐츠 교류의 점진적 확대에 합의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낸 것은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삼는 실용외교의 모범이다.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북미대화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과 남북관계 복원 모색도 이어가고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던 한국이 스스로 길을 설계하는 나라로 서고 있다. 둘째, 코스피 5000시대를 달성하며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있다. 2026년을 대표하는 장편은 단연 코스피 5000 돌파이다. 오랫동안 박스파라는 말에 갇혀있던 한국증시가 상범개정과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1년 만에 4000선을 넘고 3개월 만에 장중 5000포인트까지 올랐다. 1월 27일에는 종가기준으로 5000선을 넘어 불과 1년 전보다 2배로 뛰었다. 반도체와 AI 호황이 큰 역할을 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혀온 지배구조와 주주보호 문제를 상범개정으로 정면에서 건드린 정부의 의지도 한몫했다. 이 흐름은 이어져 6월에는 코스피가 9000선을 눈앞에 두는 수준까지 올라서며 개미투자자도 나라의 성장에 참여해 이익을 나눌 수 있다는 기대를 현실에서 보여준 것은 큰 성과일 것이다. 셋째, 미래에 투자하는 적극재정과 AI 과학기술의 도약이 시작됐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에서 후퇴하지 않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선택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구성했고 국가 R&D예산은 전년보다 19.3% 늘어난 역대 최대 35조 3000억이었다. 또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해 5년간 200조 이상의 R&D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AI 시대에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다. 지금 투자하는 것이 10년 뒤 일자리와 산업의 뿌리가 된다는 점에

서 이 결정은 매우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수도권 1극을 넘어 5극 3특 정책으로 지방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지향한다.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수도권 1극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도약의 필수 전라라고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은 집값, 저출생, 지방 소멸을 한꺼번에 낚는 뿌리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인기 없는 과제라는 이유로 미루지 않고 국가전략의 한가운데에 놓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 다섯째, 국민 모두의 성장, 성과가 나눠지는 경제를 강조한다. 대통령은 관세협상과 방산, 원전수출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근로감득권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같은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해 4년 전 잃었던 지방권력을 상당 부분 되찾았다. 투표율도 61.0%로 직전보다 10.1% 올랐다. 이것은 높은 참여 속에 국민들이 정부의 국정 방향에 힘을 실어준 결과이며 이로써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일단 주춤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치조사에서 대통령 국정평가는 긍정 38.5% 부정 57.8%였다. 2주 전에는 긍정 35.9%, 부정 59.4%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기자회견에서 웃음기 없는 얼굴로 머리를 숙이고 국정 전반을 진솔하게 밝힌 결과 성난 민심이 일단 가라앉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세계로 도약하는 한민족의 성공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성공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한다.

기고

김성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해 농업 기계의 개발·보급과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논농업은 기계화율 99.7%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밭농업의 현실은 다르다. 밭농업 기계화율은 67.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고추 수확과 배추 정식 등 일부 작업은 여전히 기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해결해야 할 농기계 연구자와 엔지니어에게 몇 가지 마음가짐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자세다.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해 지식을 넓힌다는 의미처럼 농기계와 농작업의 특성을 잘 살펴 농업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농작업 기계화 연구의 출발점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직접 농경지를 찾아 농작업 과정을 살펴보고 농업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토양과 지형, 재배 방식, 농로와 고랑의 폭 등 농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자의 자세

기계가 실제 운용되는 환경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다. 현장을 보지 않은 채 농가의 현실과 동떨어진 재배 방식이나 과도한 고랑 폭 등을 기계화 모델로 제시한다면 탁상공론(卓上空論)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농업인의 경험과 연구자의 전문성을 결합할 때 비로소 실용적인 농기계 개발과 함께 농작업 기계화 모델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둘째는 실사구시(實事求是)다. 사실에 근거해 해답을 찾는 자세가 연구의 기본이 되어 한다. 지역마다 농경지 여건과 재배 작목, 보유 농기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농로가 좁고 50마력급 이하의 중소형 트랙터가 주로 이용되는 지역에 작업 성능만을 앞세워 200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를 중심으로 한 기계화 모델을 제시한다면 현실과 맞지 않는다. 농작업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의 애로사항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잘못된 지식이나 경험만을 바탕으로 하여 성급한 결론을 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농기계 통계 기준과 해당 데이터 그리고 농작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지역별·작목별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인에게 도움되고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계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절차탁마(切磋琢磨)다. 농작업에 실질적으로 효용을 줄 수 있는 농기계와 농작업 기계화 모델은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완성되지는 어려울 것이다. 연구자와 엔지니어, 농업인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특히 연구과제를 이끄는 책임자는 자신의 판단만을 앞세우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장 농업인의 불편과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 원석을 갈고 닦아야 보석이 되듯 서로 다른 생각을 다듬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현장성이 높은 기술이 탄생한다. 연구자들이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농업기계화의 촉진은 단순히 새로운 농기계를 개발하는 것으로만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업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현장과 작목의 여건에도 맞아야 한다. 연구자들이 격물치지의 자세로 현장을 보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데이터를 살펴며, 절차탁마의 마음으로 서로의 지혜를 모은다면 밭농업 기계화는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우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우리 농촌이 크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취재수첩

전기차 전성시대인데…교통약자의 충전은?

송대웅

산업경제부 차장



바야흐로 전기차 전성시대다. 가격 부담과 충전 불편,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일시적 수요 정체인 ‘개꿈’을 겪기도 했지만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충전기 알까지 가도 직접 충전할 수 없는 교통약자에게 전기차 시대는 여전히 먼 이야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3

만3983대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 1102대 가운데 교통약자 편의기술이 적용된 것은 372대(33.76%)에 그쳤다.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면 교통약자가 어디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충전기 화면과 결제장치의 높이를 낮춘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휠체어를 타고 차량에서 내릴 공간이 있는지, 충전기까지 이동하는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조작장치에 손이 닿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기계에 편의기술을 넣었더라도 접근할 수 없다면 이용자에게는 없는 시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행정은 아직 그 출발점에서 머무르고 있다. 공공 급속충전기 구매규격서에 교통약자 편의기술 적용을 명시한 것은 2019년이다. 이후에도 구체적인 기준은 불명확해 관련 용역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

된다. 보급을 늘리는 동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이와 함께 민간 충전기의 교통약자 배려 현황을 모르면 무엇을 얼마나 개선해야 하는지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다. 충전소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도 어떤 편의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교통약자는 도착한 뒤에야 이용 가능 여부를 알아야 한다. 정부는 설치 대수와 함께 실제 이용 가능한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현황을 파악하고, 접근 공간부터 조작·결제까지 이어지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기준을 갖춘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새로 설치하는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전환의 성과는 충전기 몇 대를 더 세웠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나중에 보완할 부가 기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모두를 위한 전환이라면 충전기를 늘리는 속도만큼, 그 앞에 선 사람을 살피는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

사설

원전 해수온도 오르는데…대책마련 시급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해수온도가 심상치 않다. 올 여름 바닷물의 온도가 사고 시 냉각 성능 확보를 위해 설정된 해수온도의 상한치인 ‘설계해수온도’에 불과 1.6℃까지 근접한데 따른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3기 원자력 발전소 중 8기 발전소에서 올해 최고 수온과 상한치의 차이가 2℃ 미만이었다. 모든 원전의 35%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빛원전 1·3·4호기의 경우 최고 해수온도가 지난해 32.7~33.0℃에서 올해 33.9~34.4℃까지 올라가 설계해수온도 제한치인 35.5(1호기)~36.0(3·4호기)℃에 불과 1.6℃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빛원전 5호기는 1.7℃, 6호기는 1.8℃까지 각각 최고 해수온도와 설계 해수온도 제한치의 차가 좁혀졌다. 원전은 바닷물을 이용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는 데 올 여름 바닷물 온도가 설계해수온도에 2℃ 미만으로 다가선 것이다. 문제는 바닷물 온도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해마다 상승하면서 설계해수온도 도달까지 남은 시간까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서에는 한울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 도달 여유기간은 28년이었으나, 불과 1년 후인 2026년 조사에서는 15년이나 줄어든 13년이 됐다. 또 한울 5·6호기는 40년에서 27년으로 13년, 신한울 1·2호기는 57년에서 46년으로 11년 감소했다. 물론 한국수력원자력도 제한치 도달 예상 시점이 10년 이내인 원전에 대해서 즉시 설비개선을 추진키로 했지만 부족하다. 이보다는 단순히 ‘10년 이내’ 기준이 아닌, 실제 최고 수온과 제한치 차이, 전량 변동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전별 개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고수온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 기준을 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인구감소 전 지역 확대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가 상당하다. 이를 시행하는 지역들 모두가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지역화폐 가뭄점도 크게 늘고 있다. 얼마 안됐지만 주민 유입과 지역내 소비 기반 확대를 뒷받침하며 농촌 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살리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올 전반기부터 곡성·신안 등 전국 10곳에서 시범사업을 한 데 이어 하반기 구례·보성 등 7곳을 추가했다. 지역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지게 설계된 덕분에 현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 직접 3만18883명이었던 신안군 인구는 7월 4만2387명으로 3504명(증가율 9.0%) 늘어 시범사업 대상자중 가장 높았다. 함께 시작한 10개 군 모두에서 이런 증가세가 나타나 이들 지역 인구는 7월 총 33만4904명으로 사업 직전보다 1만5899명 증가했다. 지역화폐 가뭄점도 크게 늘었다. 곡성군은 올해 1월 1069곳에서 7월 1303곳으로 234곳(증가율 21.9%)이나 증가했고 전 시범사업 대상지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내년부터 이 사업 탈락 지역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4곳에 이어 나머지 12개 군까지 혜택을 넓혀 관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전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통합시와 해당 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 정부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올해 사업이 국비 40%, 시비 30%, 군비 30%, 내년 2차 사업은 국비 50%, 통합시·군비 각각 25%인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면 사업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군 단체장과 농민단체가 앞다투어 호응할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통합특별시는 이 사업이 인구 감소지역 전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정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광남신문과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자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광남신문(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